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 ‘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2016.12.23. |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 |
sijeong11@naver.com

경제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소득 분배(1차 소득분배)의 개선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의 재분배, 즉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2차 소득분배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담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당장에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꿈과 희망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5개년 단위의 계획을 함께 기획하고 토론해보자.

앞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계산된 연 7.6조 원의 금액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가져갈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즉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 임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의 자기들 임금 몫의 5%를, 중소기업 하청 단가 인상 등의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양보한다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6.8%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그는 제시한다.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자 분배 금액의 5%는 전체 총수익의 0.4% 정도다. 따라서 대기업 총수익 중에서 노동자의 분배 비중이 7.7%에서 7.3%로 줄어든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연대와 특히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할 만큼 당장의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몇 년을 두고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노동계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만한 방안이다.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170쪽).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액수가 연 4.85조 원이다. 별로 많은 액수가 아니다. 장하성 교수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 액수로는 전체 취업자가 아니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임금을, 그것도 겨우 6.8% 올리는 데 그칠 뿐이다.

야권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재벌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역설해온 해법은 결국 2013년 기준 연 7.6조원 + 4.85조원 = 12.45조 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야권의 경제담론 대명사는 경제민주화이다. 온갖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 대표로 등판시킨 이유도 결국은 그가 경제민주화의 선구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연 12.45조 원의 액수는 그 요란함과 떠들썩함에 비해 참 소박한 액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태산 명동에 서일필” 인 셈이다.

요약하자면, 야권의 경제민주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연 12.45조 원의 액수로 한국경제의 핵심적 불평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계가 많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과 박영선 의원, 국민 의당 안철수 의원과 김성식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함께 하고 있다.

대자본 대 중소·영세자본의 대결이나, 총자본 대 총노동의 대결이나

정부의 공식 통계를 따르더라도 현재 전체 취업자의 1/3인 600만 명가량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이들의 월 소득을 중소기업 정규직 수준인 월 300만 원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연간 비용은 약 110조 원이다. 다른 한편, 노동계 통계에 따르자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인 900만 명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의 소득을 월 300만 원으로 높이려면 연간 약 16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어떻게 600~900만 명에 이르는 월급 150만 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월급 300만 원 이상 받는 정규직 중산층 노동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곧 연 110~162조 원의 근로소득이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 분배되게 만드는 과제이다.

그런데 재벌그룹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야권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은 불과 연 10조 내외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

액수가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분배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압도적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식당·카페 등에서는 인권과 노동권, 노동조합권이 야만적으로 유린되고 있으며, 그 10조 원 내외의 액수마저 고스란히 기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바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종업원의 권리를 대폭 신장시키는 지역적, 산업적, 사회적 연대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운동의 권리를 법제도로 합법화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기업주들 및 경영자들에게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지역별 및 산업별 단체교섭권을 강제하는 법제정 및 재정 지원에 정치권이 나서지 않고서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집권 세력의 정치적 구상과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 10조 원, 나아가 연 110~162조 원의 근로소득이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종업원들에게 새롭게 분배되는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민주주의 담론과 프레임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들에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을 소득의 재분배 또는 2차 소득분배라고 한다. 이에 반해 임금 등 근로소득과 배당·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으로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분배 또는 1차 분배라고 한다.

야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2차 분배)의 개선(복지국가) 이전에 소득의 분배(1차 분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가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후자 없이 진행되는 전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임금인상(1차 분배 개선)에 나서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2차 분배 개선)에 나서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들은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분명 한국경제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소득분배(1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개선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불평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에서 1차 소득분배는 얼마나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2012년 말에 계산된 1년간 총부가가치 생산, 즉 국내총생산(GDP)은 1,273조 원이다. 그 중 아르바이트-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임원 등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임금과 월급을 모두 포함하는 총근로소득(피용자 보수)는 583.4조 원이다. 그에 반해 기업의 법인소득과 개인들의 재산소득,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을 모두 포

합하는 자본소득(영업잉여)은 384.2조 원이다. 그 밖에 정부 몫인 세금 등이 140조 원이고 나머지는 고정자본 소모(감가상각)에 사용된 164.3조 원이다.

표 1.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민총소득의 제도부문별 구성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고정자본소모	
	국민소득(NI)		자본소득		
	노동소득	개인 영업잉여			
가계 소득	비용자보수	개인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고정자본소모
기업 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고정자본소모
정부 소득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소모

정부소득을 논의에서 제외할 때, 자본소득(영업잉여) 대비 근로소득(비용자 보수)의 비율을 ‘노동소득분배율’ 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2015년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 = 근로소득/근로소득+자본소득 = 695/695+409 = 0.63이다. 즉 6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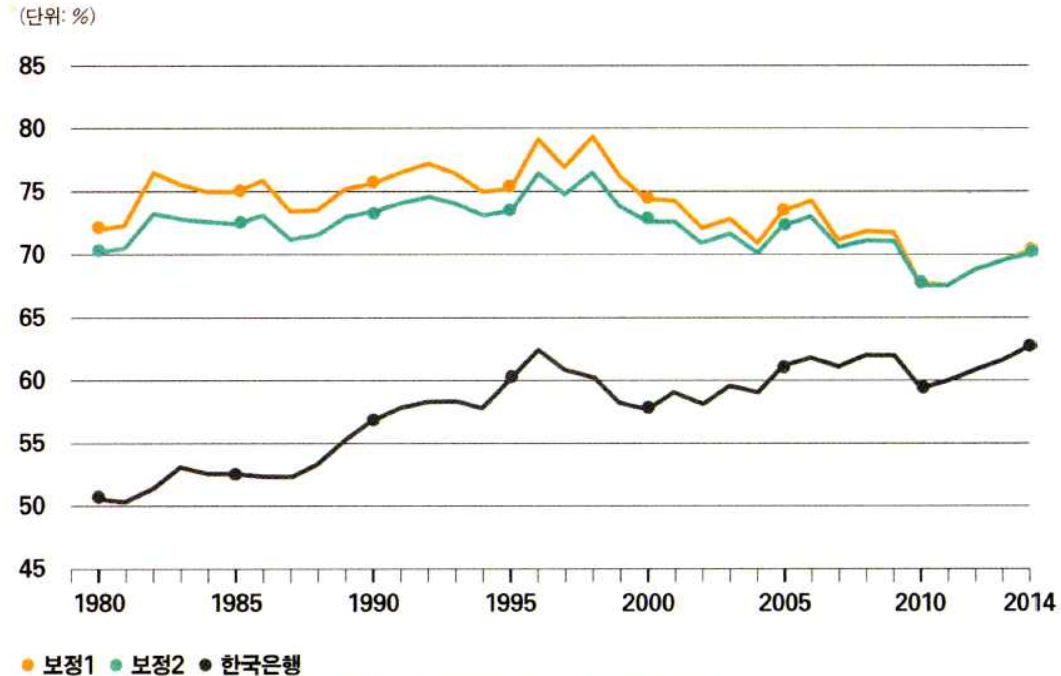
표 2. 국민총소득의 구성 (단위: 조 원)

	2007	2009	2011	2013	2015
노동소득 (A)	460	501	571	631	695
자본소득 (B)	291	308	383	392	409
고정자본소모	179	222	253	279	307
생산 및 수입세(공제) 보조금	114	119	138	143	160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4.16	-2.30	-5.36	-4.32	-4.70
합계 = 국민총소득	1,040	1,148	1,341	1,440	1,566
노동소득분배율 (A/A+B)	0.61	0.62	0.60	0.62	0.6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7~2015년 기간에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63%이다. 그런데 오늘날 선진국들 중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스웨덴의 노동소득분배율의 과거 30년 평균값은 75%이다. OECD 평균인 독일의 과거 30년 평균값은 70%이다.

그림 1.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참고 : '보정 1'과 '보정 2'의 추정 방법은 아래의 보고서 방식을 따랐다.

이병희 외,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연구보고서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2013.

보정 1 :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여 수정한 것임.

보정 2 :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라고 가정하여 수정한 것임.

자료: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70쪽 재인용

이것은 한국이 OECD 평균인 이탈리아와 독일 수준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려면 현재의 60%(2011년의 경우)에서 10%p를 높여 7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웨덴 수준이 되려면 15%p를 높여 75%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높이려면 70~100조 원(OECD 평균 수준) 또는 100~150조 원(스웨덴 수준)의 국민소득이 자본소득(영업잉여)으로부터 근로소득(피용자보수)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즉 연 70~150조 원가량의 국민소득이 자본소득(기업소득 및 재산소득)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새로이 분배되는 수준의 대담한 경제민주화(1차 소득분배)가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오늘날 전체 근로자의 1/3~1/2인 600~900만 명의 월소득 150만 원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사내하청 종업원,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월소득을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려면 연 110~160조 원가량의 근로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수치 역시 이와 비슷하게 연 70~150조 원가량의 소득이

자본소득(기업소득 및 재산소득)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이전되는 대단한 수준의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온 야권의 경제민주화 즉 주주자본주의(주주민주주의) 방향의 재벌그룹 개혁과 그리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그리고 ‘을(乙)지키기 운동’ 등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야권의 경제민주화론을 대표하는 장하성 교수 자신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즉 ‘공정한 시장질서’ 위주의 경제민주화로는 연 7.6조 원의 소박한 금액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근로소득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재벌그룹 개혁(공정거래법 규제)에 국한된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은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방향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동권과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민주주의 담론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과제는 아르바이트·비정규직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이며 그리고 이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아르바이트·비정규직의 숫자를 대폭 줄여나가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종업원을 모두 포괄하는 노동운동, 그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의 형제자매처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협력하는 진정한 형제애(fraternity)의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형제애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이 형식과 겉치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률적으로 권리가 확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지역별, 산업별 사용자 측과 맞설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회피하는 사업주 측을 처벌하는 법률적 강제도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대·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의 모든 기업주 및 경영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부유층 등의 자산가(재산가)로 구성된 총자본(자본소득)에 맞서서 모든 대·중소기업 노동자와 영세·자영업 노동자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단결하여 총노동(근로소득)의 권리와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실제와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민주주의의 담론과 프레임이 필요하다.

공정한 시장질서 대 공정한 노사질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제민주주의를 ‘공정한 경쟁’ 또는 ‘공정한 시장질서’로 이해한다. 이들은 국가의 역할을 ‘독과점 폐해의 시정’으로 이해하면서, 독점과 경제력 집중이 없이 공정한 시장에서 완전경쟁 원리가 작동

하게 되면 그 완전경쟁시장이 부와 소득을 자연스럽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복지국가 같은 ‘인위적인 소득재분배’ 체제는 필요 없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최소화시켜도 된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경제민주화 담론의 기초를 만들어온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같은 이들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뭐 그리 필요하냐?” 고 반문하면서 시큰둥한 주제로 여긴다. 그들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게 되면 복지국가 같은 사후적 재분배 장치는 별로 필요 없다고 인식한다. 다시 말해 재벌그룹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경쟁시장 메커니즘 내에서 소득의 원천적 분배’ 장치를 잘 만들면 되는데 뭐 하러 ‘시장 메커니즘 외부에서의 소득 재분배’ 장치를 만드느냐는 반응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현상 역시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즉 완벽한 경쟁적 시장가격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그룹과 국가의 시장개입(관치경제) 같은 시장 ‘왜곡’ 요인을 제거하여 경쟁적 시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벽한 경쟁적 시장질서(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한 소득분배(하청 단가 인상)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과연 ‘공정시장 원리’ 를 강화하면 임금 격차가 사라질까? 가령 재벌그룹이 축소되어 계열 분리되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사라질까? 예컨대 대우그룹과 쌍용그룹이 해체된 이후 매각된 한국GM(과거 대우자동차)과 쌍용차, 그리고 르노삼성에 매각된 삼성자동차의 현실을 보자. 과연 그 독립 대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후한 하청 단가를 하청협력업체들 특히 협력중소기업들에게 지불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청 단가는 현대기아차만큼 깎이고 있고 게다가 하청물량 자체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협력업체들에서 임금 단가가 높아진 일도 없거니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전혀 줄지 않았다. 좀 더 경쟁적인 시장질서가 만들어지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본 모순, 즉 돈 없고 자본 없는 사람들의 저임금, 저소득 문제가 해결될까? 원리상 입증할 수 없는 엉터리 주장이다.

서구에서 1920년대에 처음 논의되었던 경제민주주의는 공정한 노사질서에 관한 담론이다. 197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된 경제민주주의 역시 공정한 노사질서 또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에 관한 담론이었다.¹⁾ 여

1) 서독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자’는 슬로건으로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1969-74년의 임기 중에

기서는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을 돈 없고 자본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기업과 산업, 국민경제 차원에서 확보할 것인지를 중시한다. 1주1표 또는 1원1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가치관이 아니라 1인1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관이 기업과 산업, 국민경제 차원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회사 안에서는 주주(총수 일가와 대주주, 소수주주)들이 독점한 이사회 권력과 각종 의사결정 권력을 해체하여 종업원 대표들과 그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종업원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기업의 모든 중요 의사결정 단위에 참여하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만들자는 거다. 산업차원에서는 진정한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산업별로 조직된 사업주협회와 공동으로 해당 산업을 통치하는 산업지배구조(industrial governance)를 만들자는 의미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시장경제를 관리하는 경제적 지배구조(economic governance)인 한국은행, 금융위, 공정위, 노사정위, 방통위 등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등 사회공동체의 대표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형식과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현실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선진국의 경우 경제민주주의보다 산업민주주의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인다. 산업민주주의의 핵심은 노사 관계의 민주주의이다. 기업주, 즉 자본에 대항하는 종업원/노동자의 권리를 드높여 회사의 지배구조(통치구조)와 그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 밖에서도 1인1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지공화국을 만들어 평민들도 부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회사(공장) 정문 앞에서 정지한다.” 는 유명한 말이 있다. 참된 경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회사 안에서도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부장급 이하 전체 종업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회사 이사회에 당당히 이사로 진출한다. 회사법상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는 절반을 종업원 대표자들이 차지한다. 주주와 종업원이 대기업을 공동으로 통치한다.

서독에서는 1940년대 말부터 이러한 종업원 공동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60년 넘게 정착된 제도이다. 대기업을 경우 이사의 절반을 주주 대표가, 나머지 절반을 종업원 대표가 차지한다. 스웨덴의 경우 종업원 30인 이상의 소기업부터 시작

기존의 노사 공동결정제를 더욱 확장하자는 논의를 전개하여 대기업을 경우 이사회는 절반이 종업원 대표로 구성되게끔 개혁하였다. 서구 68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경제민주주의 토론의 결과 스웨덴에서도 집권 사회민주당의 울로프 팔메 수상은 주도로 1970년대에 회사 이사회 1/3을 종업원 대표로 구성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유럽의 경제 민주주의 논의는 미국에도 상륙하여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자신의 강연을 엮어낸 책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를 1981년에 출간하였다.

하여, 종업원 이사가 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1/3을 차지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사장(대표이사)과 경영진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 만약 종업원 이사들이 반대한다면 특정 사장 후보의 선출을 저지할 수 있다. 예컨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하는 이견희 일가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CEO가 될 수 없다. 이견희나 이재용 같은 경영주들은 삼성전자의 경영진에서 물러나야 한다.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렇듯 산업민주주의와 노동권 또는 종업원 권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아무리 모든 국민이 투표권과 공직 출마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뭐하나? 정작 매일 매일 출근해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에서 종업원들이 노예로 취급받고 일체의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없다면 말이다. 그야말로 ‘돈 많은 자들의 독재’, ‘돈 많은 자들의 갑질’, 그리고 ‘종업원과 서민들은 노예’ 인 것이 헬조선의 현실이다.

가난한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한편,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자본소득(영업잉여) 수치에는 식당과 카페, 구멍가게 등을 운영하는 빈곤한 자영업자들의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인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상 자본소득으로 잘못 계산된다. 이것은 국민계정의 계산기 범상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수치는 일정하게 보정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 또는 2/3을 자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정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 중 2/3을 자본소득(개인 영업잉여)이 아닌 근로소득(피용자 보수)로 간주할 경우 예컨대 2012년 노동소득분배율은 약 68%로 상승한다.²⁾ 2012년 자영업자 영업잉여 116조의 2/3인 77.4조 원을 자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1/3가량인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연 77.4조 원의 근로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이들이 1인당 연평균 1300만 원, 월 11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영업자들의 2012년 비근로소득(사업소득) 38.6조 원을 합쳐서 116조 원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1930만 원, 월 160만 원이다. 이것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버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업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2) 스웨덴과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의 노동소득분배율 수치 역시 자영업자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스웨덴과 독일의 노동소득분배율을 70%, 75%로 놓고 한국의 그것을 60%로 놓고 행한 계산은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과제에는 자영업자 소득을 월평균 16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과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1998년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결과로 대기업에서 정리해고, 명퇴/희망퇴직으로 수백만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 창업에 나섰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많은 600만 명의 자영업주들이 생겼다. 2017년에 집권할 새 정부는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영업주 숫자를 그 절반인 3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자영업을 그만둘 300만 명이 월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피고용직 일자리를 얻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이른바 상시적 인력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권에는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희망퇴직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적자를 내지 않은 흑자 기업이 종업원을 수시로 해고하는 행태를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원천 봉쇄해야 하며, 적자상태 기업의 경우에도 최대한 해고를 피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좋은 정책의 상당수가 이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개발독재 시절에 시행되었었다. 오늘날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시행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더구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의 종업원들도 포함하는 진정한 형제애 정신의 노동운동이 성장해야 한다. 임금이 꾸준히 인상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이들이 자영업인들이며 따라서 그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인들의 단계적 퇴출에 대비해 이들 전용의 고용보험과 적극적인 전직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도 직장 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향후 집권 5년의 목표, 폴란드와 일본 수준의 소박한 복지국가

경제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소득 분배(1차 소득분배)의 개선만을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의 재분배, 즉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2차 소득 분배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대담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2015년의 국내총생산(GDP)은 1559조 원인데, 국가의 공공복지 재정지출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단지 그 10.5%인 164조 원에 불과하다.³⁾ 우리나라

3) 물론 이것마저 과다 평가되어 있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OECD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만이 주택 복지 예산으로 계상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액(후에 상환되는)의 연 10조 원에 이르는 액수 전체가 주택복지예산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과거의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대출을 제외할 때 우리나라의 순수한 주택복지 국가에

라가 OECD 평균인 GDP의 22% 수준의 소박한 공공복지를 시행하려면 OECD 평균 복지국가인 폴란드와 뉴질랜드, 일본을 모방해야 한다. 그러려면 2015년 기준 343조 원의 복지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179조 원의 국가예산(중앙정부+지자체 예산)이 복지재정에 새로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것만 해도 막대한 액수이다.

그 뿐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또는 독일 수준의 복지(GDP의 28%)를 하려면 2015년 기준 437조 원의 공공복지가 필요하다. 즉 2015년 기준, 273조의 신규 복지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깔보는 이탈리아 수준의 삶의 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황당할 만큼 큰 액수의 소득재분배가 필요한 셈이다. 하물며 우리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GDP의 30~32%)를 하려면 2015년 기준, 304~335조 원의 신규 복지예산이 필요하다. 지금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액수이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듯 연 179~335조 원의 신규 국가복지 예산을 새로이 마련하지 않고서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업원을 포함하는 4500만 평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노인연금과 아동수당, 청년 구직수당과 실업수당, 초중고 및 대학의 공교육 질적 강화, 선진국 수준의 주택복지와 도시계획,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선진국 수준의 공공 문화·예술·과학 인프라와 스포츠·레저·생태 인프라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액수는 우리 삶의 질을 선진국처럼, 하물며 폴란드, 이탈리아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절대 금액이다.

삶의 질 개선 위한 20~30년간 5개년 단위 계획경제의 대장정

앞서 우리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연 70~150조 원 규모의 경제민주화, 즉 1차 소득분배(원천적 소득분배)가 새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보다시피 연 179~335조 원 규모의 복지국가, 즉 2차 소득분배(소득의 재분배) 역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 150조 원의 사회복지 국가예산을 제쳐두더라도 말이다.

경제민주화(저임금 종업원 임금인상)과 복지국가 예산을 모두 합쳐 계산하면, 2015년 기준 연 250조~485조 규모의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2015년의 국내총생산 1559조 원(국내총소득 1556조 원) 중에서, 기존의 연 150조 복지예산에 추가하여, 연 250~485조 원의 소득이 4500만 서민들에게 새로이 추가 분배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 400조~640조 규모의 복지국가+경제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대장정을 2017년에 집권할 새 대통령의 정부가 시작해야 한다.

산은 연 2조 원 이내에 불과하다.

야권의 일부 경제학자 및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기껏해야 연 7.6조 원 규모의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야 한다. 대략 연 500조 규모의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4500만 서민들에게 그 역사적 대장정을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에서 탈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내일 당장에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먼저 1단계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폴란드, 일본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고, 그 다음 10년 뒤에는 이탈리아, 독일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도정을 기획해보자. 그리고 다시 그 다음 10년 뒤에는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30년에 걸친 대장정을 기획해보자. 이것을 위해서는 30년간 6차에 걸친 5개년 단위의 계획, 인간개발과 공동체 개발을 위한 계획경제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의 야권정치와 진보정치는 헬조선 탈출을 위해 청년들에게 열정을 다해 ‘거대한 전환’의 꿈과 희망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손 내밀지 않았다. 이제 미국의 샌더스처럼 역사적 대장정의 길을 제시하고 각 분야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리들의 꿈과 이상(理想), 국가 비전에 대해 토론하는 위대한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기획해 보자. 인간 개발, 개성 개발, 공동체 개발을 향해 수십 년간 이어질 5개년 단위의 계획을 함께 기획하고 토론해보자.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2월 23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어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연탈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휴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종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 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정승일
복지	11/14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최정은
경제	11/18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싹쓸이'	정승일
경제	11/21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②	김영석
경제	11/25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정승일
마을	11/29	마을계정 : 관계 줄거리의 정산	강세진
경제	12/5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정승일
경제	12/9	'진짜' 경제민주화로 ① 재벌만이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가 문제	정승일
마을	12/12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최정은
경제	12/16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정승일
경제	12/19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송종운
경제	12/23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 '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정승일